

#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분석

## Path Analysis of General Government Debt to Individual Suicide

이용환\*, 방희명\*\*

남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Hwan Lee(leejpn0616@gmail.com)\*, Hee-Myung Bang(okbhm@nambu.ac.kr)\*\*

### 요약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 > 0.05$ 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국가채무비율 | 생활물가지수 | 가계부채비율 | 자살률 | 경로분석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pathway from the 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GDR) to the age standardized Suicide Rate(suicide rate).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GDR,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living necessities(CPIL), the household debt to GDP ratio(Household Debt), and suicide rat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tandardized data from 2001 to 2015 of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and th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sis IBM SPSS 22 and Amos.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the path of GDR-CPIL-Household Debt-Suicide rate, and the direct of effect were in order 0.954, 0.904 and 0.675 were confirmed. The indirect effect of GDR on Household Debt is 0.862, GDR on Suicide Rate is 0.581, CPIL on Suicide Rate is 0.610. Neither of these indirect effect coefficient was significant( $p > 0.05$ ).

■ keyword : Government Debt Ratio | Consumer Price Index for Living Necessaries | Household Debt | Suicide Rate | Path Analysis |

## I. 서론

국가통계포털의 OECD국가 자살률 통계(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2위를 유지하다가 2011년 1위를 차지한 이후 다시 2위를 유지하고 있다[1].

통계청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 항목 중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13세 이상 인구)'의 설문조사 결과 '자살충동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1~9.1%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5%로 조사기간중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이유는 자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에서는 OECD국가 자살률 1위, 2위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2011년 제정·공포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2019.7.16. 시행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제처는 본 법률의 제정이유를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3]이라고 하였으며, 국가에서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2011년 이후에는 자살률이 조금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24.3명을 기록하고 있다[1].

또한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4]의 사망원인별 사회경제적 비용(2014년 기준)의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암 사망에 의한 사회적 비용(14.0조원),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6.5조원),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사회적 비용( 5.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주요 경제활동 층인 20~40대의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자살에 의한 손실비용의 80%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황을 국가가 인식하여,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20)에 '정신건강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자살률이 급증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의 전년대비 연도별 변화율을 보면 1997년~1998년은 34.21%(1998년),

2000년~2005년은 15.91%(2003년), 2006년~2011년 11.43%(2009년)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록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채무비율 평균변화(6.24%)을 약 2배에서 5배를 상회하는 기록에 해당된다 [9][10].

이상의 자료만으로 국가채무비율과 자살률의 변화양상이 유사하다고하여 국가채무비율이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변화가 자살률 변화에 이르게 되는 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통하여, 자살자 당사자만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 전염성이 크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살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국가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와 같이 채무상환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으며,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사례와 같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11].

### 2. 에밀 뒤르켐의 자살이론

에밀 뒤르켐(Durkheim, Emile)(2017)은 자살을 비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성 자살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 요인의 세 가지 자살을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의 기본유형과 아노미성 자살과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혼합유형으로 나누었다.

에밀 뒤르켐은 아노미를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를 무규범 상태 혹은 이중규범 상태라 정의하였으며, 이런 상태에서

는 집단적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거나 유익하지만 급작스런 전환을 맞이하면 자살곡선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경제적 아노미만이 자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혼 및 별거로 인한 자살의 경우도 아노미로 해석하였다[12].

### 3. 자살의 경제적 원인

자살을 경제적 원인에서 찾고 있는 모든 연구가 에밀 뒤르켐의 경제적 아노미에 의한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겪은 IMF 구제금융신청, 신용카드 사태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자살과 관련시킨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경환(2000)은 IMF 전과 후의 자살양상의 변화를 알기위해 동아일보 전자신문에 수록된 “자살”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1999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IMF전과 후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의 자살이 IMF 이후 2배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자살 원인별로는 IMF 이전과 이후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IMF이후에는 이전보다 약10%가 증가하였다[13].

2017 자살예방백서(2017)에 따르면 연도별 자살률 추이는 1998년 IMF 구제금융신청과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파산하면서 시작된 세계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남, 여 자살률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소폭 상승한 이후 2015년까지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16세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은 1999년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급상승하여[14] 김경환[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동기별 자살현황은 2015년 기준 ‘정신과적 질병문제’ 다음으로 ‘경제생활문제’, ‘육체적 질병문제’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동기에 의한 자살의 증가율이 다른 동기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실업과 자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에 따르면 자살률은 부정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변화할 때 자살위험이 증가한다[15]고 하였으며, 김형수 등(2013)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자살률의 경제적인(경제성장률, 실업률)과 사회적요인(이혼율)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노인의 자살률이 경제적인 요인의 높고 낮음 보다는 경기침체로 급격히 경제수준이 낮아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진 시기에 노인 자살률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16].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안정기로 구분하여, 실업률과 자살률의 관계를 분석한 윤우석(2011)의 연구에서는 IMF 경제위기에 의한 실업률 급증기에는 실업률과 자살률은 양의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적 안정기에는 실업률이 증가하더라도 자살률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격차는 자살률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만 소득격차의 정도보다는 소득격차의 폭이 증가하는 속도가 자살률에 보다 관련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7].

Shu-Sen Chang(2009)은 아시아 경제 위기(1997년부터 1998년까지)가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보건기구의 사망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살률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감소하였으며, 1997년과 비교하여 1998년 남성 자살률은 일본 39%, 홍콩 44%, 한국 45% 증가한 반면, 타이완과 싱가포르에서는 자살률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본, 홍콩, 한국의 자살률의 증가는 실업률 상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

노용환(2006)은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1990년부터 2004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을 경제·사회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제지표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이며, 사회지표로는 고령인구비율, 도시화정도, 이혼율, 출생률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사회 설명변수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남, 여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자살확률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지역별 실업률과 남·여 자살률은 반순환적(counter-cyclically)이며, 실업률의 증가는 오히려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19] 윤우석[1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자살률을 예측하는 도구로 소득수준을 이용한

Chuang(1997)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타이완의 23개 도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소득수준이 자살률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밝혔다[20].

김중섭(2010)은 한국, 멕시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4개국에 대한 경제위기와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 실업률과 자살률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지만, 반대로 브라질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아르헨티나는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며, 멕시코는 시차를 두고 약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1].

## 5. 가계부채와 자살

부채부담지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윤정(2015)은 단기, 중기, 장기 부채부담지표와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중기와 장기 부채부담지표에서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자살생각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카드부채와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자살생각을 갖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카드부채와 사채의 자살위험성을 제시하였다[22].

최윤정 등(2014)의 연구결과는 남성 자살률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Shu-Sen Chang[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여성 자살률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 불평등의 지표인 지니계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의 자살률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성의 자살률은 1인당 지방정부의 복지예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23].

노대명의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2017)에서 일본이 빈곤층의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업법 개정 등 정책수립을 통해 자살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근로 빈곤층이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할부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을 통해 20%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가계부채대책과 자살대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24].

유경원(2010)의 연구에서 가계부채는 소비자 금융제

도의 발달로 가계가 필요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소비를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25], 김정욱 등(2016)은 가계부채 증가의 역기능에 의한 경제 불안은 소득분위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며, 비 은행권 부채의 크기가 클수록 소득분위 하락 확률도 커진다고 하였다[26].

박정민 등[27]은 부부폭력의 위험도는 가계부채비와 부채상환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28-31]에 수록에 수록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서로 크기가 다른 변수집단들이 사용되거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인 경우 먼저 이들 변수를 표준화(standardize) 또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32].

$$\text{표준값} = \frac{\text{요소값} - \text{평균}}{\text{표준편차}} \quad (1)$$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1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국가지표체계(2018)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는 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 채무를 의미하며,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총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33].

$$\begin{aligned} \text{국가채무} &= (\text{국채잔고} + \text{차입금잔고} \\ &+ \text{국고채부담행위} + \text{지방정부채무}) \quad (2) \\ &- \text{지방정부의대중앙정부채무} \end{aligned}$$

### 2.2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지표로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쌀, 채소, 라면 등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의미한다[34].

### 2.3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총액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가구에 도움을 주지만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되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35].

### 2.4 연령표준화 사망률(자살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한다[36].

$$\begin{aligned}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인구})}{\text{표준인구}} \\ &\times 100,000 \quad (2) \end{aligned}$$

식(3)에서 자살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을 자살률로 대입하여 계산하며,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자살이란 통계청의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한 경우 어린

자녀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해당된다[36].

## 3. 경로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물가지수가 상승되고,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저축의 실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이 되어 가계부채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며, 가계부채는 자살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경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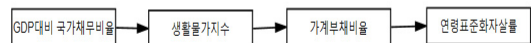


그림 1. 경로분석모형 설정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을 배병렬(2018)은 연속다중매개모형(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이라 하였으며[32], 이 모델을 적용하여 Jessica Kelliher Rabon등(2017)은 미국 Southeastern 대학교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자기연민(Self-Compassion) - 우울감 (Depressive Symptoms) - 웰빙행동(Wellness Behaviors) -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의 경로를 [37], 성소영 등(2018)은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4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면화된 수침심 - 분노억제 - 우울 - 자살사고’의 경로를 [38], 정운덕(2018)은 남자 축구부에 소속된 대학생 선수들 2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적동기 - 운동몰입 - 신체적자기효능감 - 심리적행복감’의 경로 [39]를 구명한 바 있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량

표준화하기 전 원자료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술통계량

구 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국가 채무비율	17.60	37.80	27.40	6.22	38.78
생활 물가지수	67.58	100.22	86.29	11.74	137.92
가계 부채비율	-0.9	7.5	4.27	2.26	5.10
자살률	15.6	29.1	24.07	3.57	12.75

[표 1] 기술통계량에서 각 변수의 최대치는 국가채무비율 2015년, 생활물가지수 2014년, 가계부채비율 2009년, 표준화자살률 2009년에 발생하였으며, 가계부채비율의 최소치는 2002년에 해당된다.

2. 시각적 분석

[그림 2]에서 국가채무비율과 생활물가지수의 추세선은 모두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림 3]은 가계부채비율과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이동평균으로 제시되었으며, 각각 두 개의 변수들 변화 경향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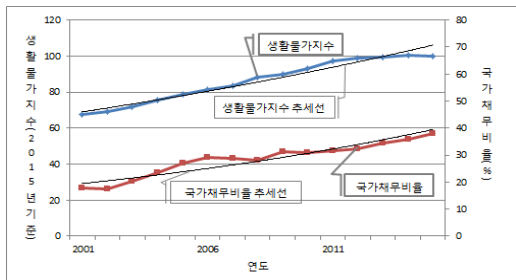


그림 2. 국가채무비율과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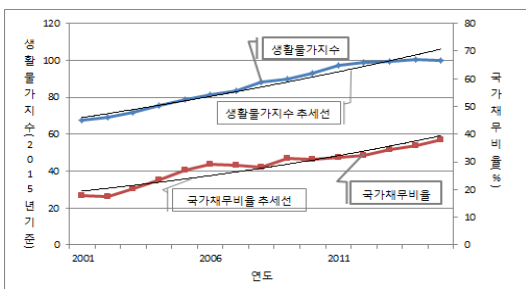


그림 3. 가계부채비율과 자살률

3. 경로분석

분석결과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0' 일 때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라고 하며, 완벽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0][4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에서 GFI를 비롯한 AGFI까지 모두 수용기준을 충족하므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와 [표 3]에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s Regression Weights)를 표시하였다. [표 3]에서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과 P(p-value)는 비표준화계수에서 산정된 값을 표기하였다. C.R은 모두 1.96보다 크며, 유의확률 P는 모두 0.05보다 작은 값으로서, 각 변수들 간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	GFI	RMR	RMSEA	NFI	CFI	AGFI
수용기준	0.90이상	0.05이하	0.05이하	0.90이상	0.90이상	0.85이상
산정값	1.000	0.000	0.008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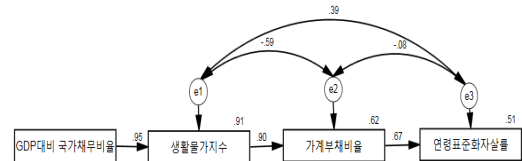


그림 4. 경로분석 결과

표 3. 표준화 회귀계수

구 분	Estimate	S.E	C.R.	P
국가채무비율 → 생활물가지수	0.954	0.152	11.855	***
생활물가지수 → 가계부채비율	0.904	0.033	5.203	***
가계부채비율 → 자살률	0.675	0.343	3.110	0.002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0.954,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0.904, 가계부채비율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0.675로 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왔다.

[표 4]에서 국가채무비율→자살률의 간접효과 0.581과 생활물가지수→자살률 0.610은 Bootstrap 방법(95% 신뢰수준으로)으로 산정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p>0.05)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변수간 효과분석

구 분		국가채무 비율	생활물가 지수	가계부채 비율
생활물가 지수	T.E	0.954	-	-
	D.E	0.954	-	-
	I.E	-	-	-
가계부채 비율	T.E	0.862	0.904	-
	D.E	-	0.904	-
	I.E	0.862	-	-
자살률	T.E	0.581	0.610	0.675
	D.E	-	-	0.675
	I.E	0.581	0.610	-

주: T.E 총효과, D.E 직접효과, I.E 간접효과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1년~2015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0.954의 직접효과만 존재하였다.

둘째,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셋째, 가계부채비율은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0.675의 직접효과를 보였다.

넷째, 간접효과는 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유의확률 p>0.05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추세선의 형태는 국가채무비율과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과 자살률이 상호 유사한 형태를 보였

다.

본 연구는 국가채무비율은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자살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는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영국, 미국 등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를 감축하였으며[42],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초기에는 실업률 증가, 금리불안 등을 막기 위해 공공복지를 확대하였지만, 경제위기가 발생 초기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국가는 긴축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재정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감축을 위해서 증세와 사회보장제도들의 급격한 축소를 수반하였다[43].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1.2%로써 OECD 평균 22.0%의 절반에 머무르는 낮은 수준이지만[44],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단순한 수치상 의미 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 경제위기 등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예산감축과 함께 실업률 증가, 금리 불안 등으로 취약 계층은 더욱 빈곤이 심화되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1\\_01&vwcd=MT\\_RTITLE&parmTabId=M\\_02\\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1_01&vwcd=MT_RTITLE&parmTabId=M_02_01_01#SelectStatsBoxDiv), 2019.03.05.
- [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3), 2019.03.05.
-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43&efYd=20181211#0000>, 2018.12.05.
- [4]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
- [5]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경과 원인, 1998.
- [6] 이인호, 박민선,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

- 한국경제포럼, 제8권, 제3호, pp.19~48, 2015.
- [7] 신용상, 구본성, 하준경, 이규복, 송재은, 이윤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 [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2019.03.05.
- [9] 김민영,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지역사회의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10]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1.
- [11]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0>, 2018.12.10.
- [12] Durkheim, Emile,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abu Press, 1952, 황보종우 역, *자살론*, 청아출판사, 2017.
- [13] 김경환, *일간지 기사 검색을 통한 IMF 전과 후의 자살 양상의 변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4] 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2017.
- [1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2018.1.23.
- [16]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 [17] 윤우석,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검증: 1995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계열자료분석,” 제20권, 제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p.153-185, 2011.
- [18] Shu-Sen Chang, David Gunnell, Jonathan A. C. Sterne, Tsung-Hsueh Lu, and Andrew T. A. Cheng, “Was the economic crisis 1997-1998 responsible for rising suicide rates in East/Southeast Asia? A time-trend analysis for Japan, Hong Kong,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8, pp.1322-1331, 2009.
- [19] 노용환,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접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연구*, 제54집, 제3호, pp.177-200, 2006.
- [20] H. Chuang, W. Huang, and Wei-Chiao, “Economics and Social Correlates of Regional suicide Rates,” *J. of Socio-Economics*, Vol.26, pp.277-289, 1997.
- [21] 김종섭,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제23권, 제3호, pp.45-65, 2010.
- [22] 이윤정, “송인환,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3권, 제1호, pp.56-82, 2015.
- [23] 최윤정, 박지연, “생활고와 복지증진이 한국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3, pp.155-182, 2014.
- [24] 노대명,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보고서 2017-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25] 유경원,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pp.123-128, 2010.
- [26] 김정욱, 원승연,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한국금융학회, 금융연구*, 제30권, 제3호, pp.109-139, 2016.
- [27] 박정민, 박호준, 오욱찬,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4호, pp.33-57, 2017.
- [28]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2018.12.10.
- [2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7005&vw\\_cd=MT\\_ZTITLE&list\\_id=C1\\_1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7005&vw_cd=MT_ZTITLE&list_id=C1_1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12.10.
- [3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608&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608&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 2018.12.10
- [3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2&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2&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12.10.
- [32] 배병렬,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도서출판 청담, 2018.
- [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0>, 2018.12.10.



[3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quick\\_0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quick_05), 2018.12.10.

[35]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8>, 2018.12.10.

[36]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54&kosisYn=Y>, 2018.12.10.

[37] Jessica Kelliher Rabon, Fuschia M. Sirois, and Jameson K. Hirsch, "Self-compassion and suicid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Serial indirect effects via depression and wellness behavior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66, No.2, pp.114-122, 2017.

[38] 성소영, 박기환,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 사고의 관계: 분노억제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23권, 제1호, pp.209-230, 2018.

[39] 정윤덕, "대학축구 선수들의 내적동기에 관한 계층적 회귀분석 모형,"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3권, 제6호, pp.91-106, 2018.

[40] 이학식, 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집현재, 2013.

[41] Karin Schermelleh-Engel, Helfried Moosbrugger,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Vol.8, No.2, pp.23-74, 2003.

[42] 김태일,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 pp.53-75, 2011.

[43] 주은선,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97~122, 2011.

[4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9), 2019.05.05.

저 자 소 개

이 용 환(Yong-Hwan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사)
- 1987년 9월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석사)
- 1998년 9월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부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자원봉사, 사회복지정책

방 희 명 (Hee-Myung Bang)

정회원



- 1985년 2월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8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